

# “광주 오월정신, 왜곡 넘어 미래세대 교육으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3〉 책임과 과제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6년이 지났지만, 진실 규명과 역사적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피해 치유는 더디고, 핵심 쟁점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시간적 한계와 자료 부족 등으로 발표 명령 책임자와 암매장 의혹 등 주요 사안은 끝내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5·18은 ‘완결된 역사’가 아닌 ‘진행 중인 역사’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국가 폭력 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단죄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진실규명 우선 과제로는 ‘발포 책임 규명’이 5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16.1%, ‘진실은 왜 과정 규명’ 14.3%, ‘인권 유린 실태조사’ 7.1% 순이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컸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7.4%, ‘대체로 필요하다’는 19.8%로 나타났다. 헌법 전문 수록 시 기대되는 변화로는 ‘불필요한 역사 논쟁과 갈등 종식’이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가치 재정립 요구가 커졌음에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 논의는 또다시 무산됐다. 개헌안이 의결종결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과 2020년 시민사회 중심 국민발안 형식의 개헌안 역시 같은 이유로 폐기됐다. 개헌 무산 이후 5·18 공법단체 등 260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현장 체험 학습중인 학생들이 묘비 곁에 놓인 영정 사진과 글귀를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 왜곡도서 여전...‘50년사’ 편찬으로 보편적 가치 재조명을 기념행사, 시민 참여형 ‘런 5·18, 도청 가는 길’ 첫선

여거 단체로 구성된 ‘5·18정신헌법전문 수록국민추진위원회’와 지역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추진위원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라며 “헌정질서 회복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지만 정치권이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광주YMCA 역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국민이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라며 “헌법 전문 수록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담아야 할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역사 왜곡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5·18기념재단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독서

로’를 조사한 결과, 전국 169개 학교 도서관에서 5·18 왜곡도서 331권이 소장·열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30권, 서울 66권, 부산 39권, 경남 23권, 경북 22권 순이었다. 도서별로는 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이 110권으로 가장 많았고, 지만원의 ‘12·12와 5·18’, 대한민국교원조합의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노태우 회고록’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전국 36개 학교에서 38권이 확인됐다.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보랏빛 호수’ 역시 일부 학교에 비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내용은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 사실로 인정된 바 있어 즉각적인 조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재단은 이달 중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상으로 역사 왜곡 도서 추가 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주의·인권·평화라는 보편 가치 관점에서 5·18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진상규명 성과와 학술 연구, 역사적 의미를 담은 ‘5·18민주화운동 50년사’ 편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6개 분야·12권 규모로 구성되는 ‘50년사’는 기존 사건 중심 서술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재단은 2028년까지 원고를 완성한 뒤 2029년 발간하고, 2030년 50주년에 맞춰 공개할 계획이다.

5·18 정신을 기억하는 방식도 체험형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46주년 기념행사 가운데 올해 처음 열리는 ‘런(RUN) 5·18, 도청 가는 길’은 전남대학교에서 출발해 금남로와 5·18민

주광장까지 5.18km를 달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오월 항쟁 주요 현장을 직접 달리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코스는 전남대 정문을 시작으로 광주역, 옛 시외버스터미널 터, 금남로를 거쳐 5·18민주광장까지 이어진다. 특히 2030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러닝’ 문화와 결합해 젊은 세대의 역사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980년 당시 시내버스를 재현한 ‘민주버스’ 투어도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국군광주병원, 무등경기장, 옛 광주교도소, 5·18묘지 등 주요 사적지를 둘러보며 오월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상상하는 공간으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50주년까지 세대 화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민주주의의 대추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맑음 05:30 달맞이꽃 03:22  
☁️ 흐림 19:28 달맞이꽃 16:36



광주	☁️	15~28
목포	☁️	14~25
여수	☁️	14~24
순천	☁️	14~26
구례	☁️	14~28
광주	☁️	13~25
신도	☁️	13~25
흑산도	☁️	13~21
고흥	☁️	13~25
진도	☁️	13~23

목포	밀물(고)	11:52 / --:--
	썰물(저)	05:14 / 17:31
여수	밀물(고)	07:01 / 19:31
	썰물(저)	00:42 / 13:05

## 지하철 열 불 지른 30대 감형

마넨필 ○·광주 금남로4가역 지하철 승강장 앞에 불을 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30대A씨에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감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법제1형사부 김진현 재판장은 일 반불법행위 혐의의 기소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징역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10시18분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지하4층의 승강장 앞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철재 쓰레기통 안에 있는 비닐봉지에 불을 붙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지하철에 탑승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불은 5분 가까이 지속됐고, 30만원 상당의 철재 쓰레기통이 전소돼, 더욱이 A씨는 법원이 고지한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적 인 문제와 범행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등 범죄 전력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

## 5·18 당시 언론탄압 ‘보도지침’ 실태 밝힌다

광주전남언론인회, 오늘 5·18기록관서 시민강좌

(사) 광주전남언론인회가 14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광주5·18민주항쟁과 보도검열’을 주제로 시민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는 김주연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강연자로 나서 1980년 당시 신군부의 언론 검열과 보도지침 실태를 증언한다.

김 전 회장은 1986년 12월 월간 ‘말’지에 계엄 시기 언론 검열 실태를 폭로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이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995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서울과 광주에서 계엄군과 문화공보부가 자행한 보도검열 사례를 비롯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보도지침, 유언비어 관련 보도 유형, 언론 인 강제 해직 사례 등을 소개하며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에 설치됐던 전남·북계엄 본소 보도검열관실이 1980년 5월18일부터 20일까지 계엄군의 강경 진압 관련 기사를 언론에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하도록 사제한 사실도 언급할 계획이다. 이는 당시 시민들의 분노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5·18 왜곡·정율성 흉상 훼손 전도사 ‘징역 10개월’

‘서부지법 난동’ 연루 인물...“사회적 합의 부정” 질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50대 전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특수공용물 손괴상 혐의로 병합 기소된 윤영보(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도사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집회 현장 등에서 9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10월 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안림동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화물차로 끌어 넘어뜨리거나 둔기로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흉상 목 부분에 줄을 매달아 2.5t 승합차로 끌어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파손했다.

넘어진 흉상은 관할 지자체인 남구가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있고, 기단만 남아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윤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도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고,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도 흉상 파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5·18에 대해서는 항쟁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도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를 선동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도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서구, 나눔정신 담은 MZ주먹밥 영상 ‘화제’

홍보대사 ‘슈가토끼’...세대 잇는 오월정신 강조

광주 서구가 서구관광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슈가토끼’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MZ주먹밥’ 영상이 화제다.

서구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오월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MZ세대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영상 콘텐츠 ‘MZ주먹밥’을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는 1980년 5월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누며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했던 양동전통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서구관광홍보대사인 ‘슈가토끼’가 ‘MZ주먹밥’을 만드는 모습. 사진제공=광주 서구청

당시 양동시장 상인들은 계엄군의 폭력과 통제 속에서도 심심할만 쌀과 성금을 모아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전달하며 힘을 보탤었다. 양동시장은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5·18사적지 제19호로 지정됐으며, 시장 입구에는 주

먹밥을 쥐고 있는 시민군의 손을 형상화한 주먹밥이 설치돼 있다. 1분32초 영상은 누구나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친숙한 레시피를 활용해 오월 주먹밥을 오늘날 청년세대의 일상 언어와 음식문화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광주시, 5·18기념주간 특별교통대책 시행

18일 ‘518번 시내버스’ 2대 증차·70회 운행  
15~18일 금남공원~5·18민주광장 단계별 통제  
16일 전남대~광주역~5·18민주광장 부분 통제

광주시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주년을 맞아 시민과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심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기념행사의 주 무대인 금남로 구간(금남공원~5·18민주광장)은 행사 준비와 보행자를 위해 15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전 차선이 통제된다. 이에 따

라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19개 시내버스 노선은 인근 도로로 우회 운행하며, 이용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승강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16일 오후에는 ‘런(RUN) 5·18 도청 가는 길’과 ‘민주평화대행진’ 행사로 인해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역을 거쳐 5·18민주광장에 이르는 구간이 시간대별로

부분 통제된다.

이에 따라 좌석02번과 진월07번 노선은 우회 운행하며, 통제 구간을 지나지 않더라도 43개 노선은 현장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차 후 서행 운행한다.

참배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8일에는 국립5·18민주묘지행 518번 시내버스를 기존 10대에서 12대로 증차한다. 또 운행 횟수를 70회로 늘리고 배차 간격을 20~30분으로 단축해 참배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23일 ‘5·18청소년문화제’가 열리는 금남로 구간(금남공원~전일빌딩245)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통

제한다. 이날 이 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모두 우회 운행한다.

광주시는 행사 기간 동구, 북구,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진입로 불법 주·정차를 집중 관리한다. 민주묘지 주변과 금남로 일대에는 안내 인력과 견인차를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예정이다.

배상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과 원활한 교통 관리를 최선으로 다하겠다”며 “도심 곳곳의 통제가 예정돼 있으나 시민들은 급격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우회 노선을 사전에 확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